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

2017. 9. 15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갑래



목 차

KCMI
KCMI
KCMI

I

논의의 배경

II

과세체계 측면

III

실질과세 측면

IV

장기 주식양도소득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V

결어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논의의 배경

2017년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 조세운용계획

I

논의의 배경

- ❖ 2017년 세법개정안은 자본시장 과세 관련하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한 점에 특징이 있음
 -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의 20%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한 것은, 소득세로서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점에서 바람직
- ❖ 2017년 중장기 조세운용계획은 혁신성장과 과세형평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자본시장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어 지속적 논의가 필요
- ❖ 국내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보완 필요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축소 논의가 없음으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효율화 저해
 -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결여
 -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체계의 실효성, 형평성,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가장매매 등을 활용한 남용적 조세회피에 대한 실질과세 조항 결여
 - ∴ 담세능력이 큰 납세자들의 남용적 조세회피가 만연될 수 있음



과세체계 측면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대주주 범위 확대 I

II

과세체계 측면

❖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의 확대방식으로서 “대주주 범위확대” 방식은 과세체계 발전성이 경로의존성에 치우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

- 국내 법체계상 대주주 개념과의 부정합성: 양도세 확대 대상으로 적합한 “담세능력이 큰 투자자”의 개념과 자본시장법 등이 규정한 “대주주” 개념과의 불일치
 - ✓ 자본시장법 등이 규정한 대주주란 형식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
 - ✓ 일반 납세자들도 대주주를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로 인식하지 과세단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 있으며, 특수관계자 지분이 대주주 범위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과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식투자 회피 경향이 커질 우려가 있음
 - ✓ 대주주 범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현 소득세법 체계상 (시행령 제157조제4항) 대주주 과세대상 파악을 위한 과세체계 구축 비용이 높음
 - ✓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 주요주주(10% 이상) 등의 개념은 공시요건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금융당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소득세법상의 대주주 개념은 과세당국이 별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함
 - ✓ 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 하는 경우, 거래비용 증가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대주주 범위 확대 Ⅱ

Ⅱ

과세체계 측면

- ✓ 소득세법상 종목별 보유액 3억 이상(2021년 시행)의 대주주는 상법체계상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와 같은 경제적 집합체가 아닌 인위적인 과세 단위
- ✓ 납세자인 재무적 투자자는 대주주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 2017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1년 종목별 보유액 3억 기준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독립된 투자결정에 의한 동일 종목 주식 매입에 따라 불측의 세금을 부담하는 세제 위험은 증가
- ✓ 2017년 소득세법 개정안(시행령 개정 계획)에 따라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2021년 3억까지 낮추어지면 현 종합주가지수 수준에 비추어 상장기업 대주주 개념의 핵심인 기업의 사결정 영향력 요소가 현저히 낮아지게 됨
- ✓ 이 경우 2008년 종합소득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2006 헌바 112)의 취지가 시사하듯이 대주주 요건충족을 위한 특수관계자와의 지분합산에 있어 부부 별산제나 가족 합산과세 금지 등의 헌법적 이슈가 문제될 수도 있음
- ✓ 또한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낮아질수록 응익과세적 측면에서의 설명도 어려워짐
- ✓ 대주주 개념 중심 과세는 고소득 개념 중심 과세에 피해 조세회피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존치의 실익이 반감됨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대주주 범위 확대 III

II

과세체계 측면

- **응능부담** 원칙과의 상충: 헌법 제11조에 기반한 조세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과 세 확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기업법제상의 대주주보다는 담세능력이 큰 납세자(투자자)가 적합
- 또한 다수 종목을 보유액 요건 미만으로 소유한 대규모 투자자에게 대한 **과세 공백** 발생
 - ✓ 2017년 기준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종목당 25억 미만으로 다수 보유한 재력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 2018년, 2020년, 2021년 단계적으로 보유액 요건이 낮아지는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편입 주식 종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대형 투자자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의 기준을 개인의 투자규모 등으로 보지 않고 대주주 개념으로 잡은 것은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자의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수도 있으며,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 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상충됨
-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담세능력이 큰 투자자들이 가장매매 등을 통해 **조세회피**를 용이할 수 있게 함
 - ✓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시장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조세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 시장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시장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대응 방안

- ❖ 확대되는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기준을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에 바탕을 둔 “대주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담세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기준 설정
-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범위 확대와 맞물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반드시 있어야 함
- ❖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적·전면적 적용을 하면서 낮게 시작한 양도세율을 높여가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어가는 소프트랜딩 방안 고려 (이때 분리과세, 원천징수 체제에서 신고납부 체제로의 전환 등도 함께 논의)
- ❖ 단 대만의 실패 사례를 고려하여, 급진적 양도소득세 전면과세는 지양하여야 함
-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자 범위와의 정합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금융소득 분류과세 I

❖ 국내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분류 과세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세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금융소득분류의 불명확성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저촉되는 문제 발생

➤ 국내 소득세법 체계상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고,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분류됨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달리 장기간 누적된 소득으로서 소득실현에 따른 결집(bunching)효과 등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와 체계를 달리하여 별도로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가 있는 듯함

❖ 금융소득간 과세 분류의 불명확성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묶어 동일세율의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체제를 구축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분류범위 내에서만 합산하고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현 소득세법 체계는 경제적 현실과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입법정책적 근거 미약

✓ 이자소득과 양도소득(특히 채권)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환매조건부매매차익(형식적으로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자소득)과 같이 소득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다수 발생

✓ 배당소득과 양도소득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법인의 합병, 분할, 해산, 감자 등으로 인해 양도 없이 주식이 소멸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이상으로 주식 보유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당해 이익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입법에 의해 의제함(국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제도)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금융소득 분류과세 II

II

과세체계 측면

- ✓ 미국의 경우, 2003년 "일자리 및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감면조정법"(JGTRRA) 입법을 통해 장기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을 합하여 조정순자본이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조정순자본이득에 대해 장기자본이득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이득 세제와 배당 세제간의 세제차익을 줄이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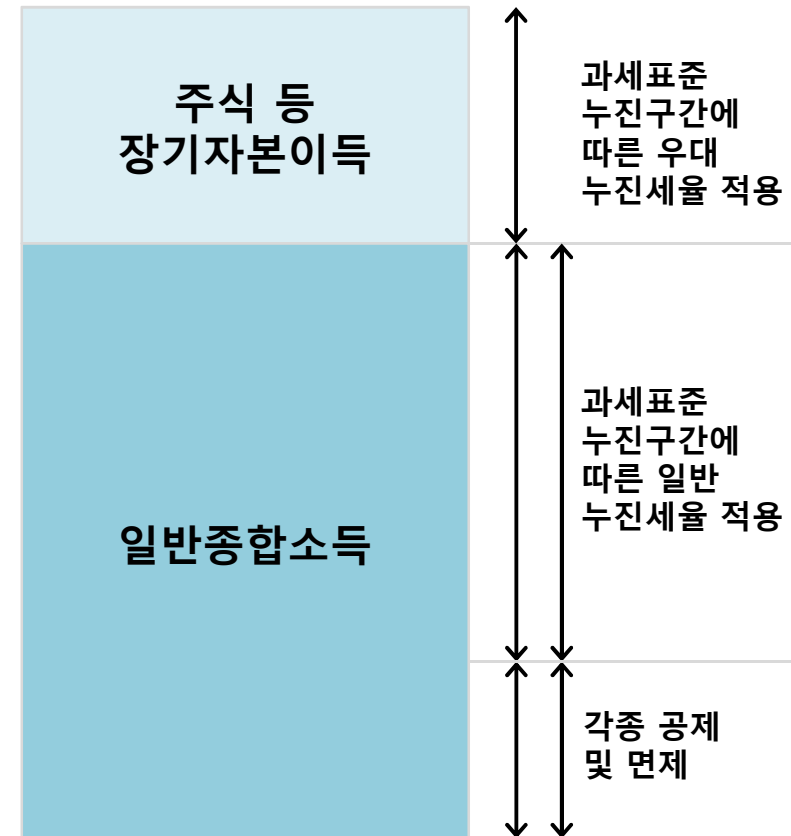
❖ 누진과세 체계와의 부정합성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인 소득이기 때문에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금융소득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주식 등 양도소득만 분류과세 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약화시키고 조세법률주의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한 장기자본이득도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구간을 적용하고, 세율적용에 있어 우대세율을 적용함
 - ✓ 반면 국내 소득세법 체계에서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한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음
- 2017년 세법개정안은 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누진과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 조치임

대응 방안

- ❖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을 분류과세하지 말고 종합과세시스템에 편입
 - ∴ 금융투자상품 장기자본이득 과세구간은 일반 종합소득을 더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
 - ✓ 연봉 2억원인 납세자가 3천만원의 장기자본이득(주식 등)을 실현한 경우와 연봉 3천만원인 납세자가 3천만원의 장기자본이득을 실현한 경우에 있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율적용을 달리 하자는 취지
- ❖ 양도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담세능력에 맞는 누진세율 구간을 정함
- ❖ 단,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식 접근방식을 고려

[금융투자상품 장기자본이득 세율적용]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이익과 손실의 비대칭적 취급 I

II

과세체계 측면

- ❖ 국내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상품간의 손실합산공제(주식과 파생상품간 결손금 합산 등)를 인정하지 않는 등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비대칭적으로 취급(asymmetric treatment) 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실무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함
 - 주식과 파생상품은 연계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 속하는 투자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구분계산 하여야 하며,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파생상품 결손금으로 공제하거나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을 주식 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02조)
 - ∴ 개인소득 과세와 법인소득 과세간 형평성,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 과세간 형평성 등 조세형평성의 문제 야기
 - ∴ 금융상품간 과세차익 발생 및 투자 인센티브 왜곡으로 인해 자본시장 투자효율성 및 조세중립성이 훼손
 -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의 비대칭적 취급, 즉 손실(결손금) 공제의 제한적 허용은 투자자의 위험회피 경향을 높여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펀드투자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의 함정” – 집합투자기구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 하는 것은 일응 납세자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손익통산을 못함으로써 전체 펀드투자자에 있어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부담이 발생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이익과 손실의 비대칭적 취급 II

II

과세체계 측면

-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 합산 등의 체계가 못 갖추어진 연혁적 원인으로, 부동산 세제 중심적인 양도소득세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투자자산인 금융상품의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음 (양도 개념에 구속됨으로써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공매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함)
 - ✓ 연혁적으로 양도소득세 미비의 제도적 보충을 위해 의제배당 등 손실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배당세제를 활용함으로써 투자손실 개념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취약해 짐

❖ 투자자산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의 비대칭적 취급은 투자자의 투자위험관리 및 포트폴리오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투자자 위험회피 경향 강화로 인해 혁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 자산배분을 하고자 하나, 자본손익 통산이 안되고 투자수단간 세제차익이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분산 후 세후 수익관리가 어려우며, 저성장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자가 무턱대고 위험자산 투자로 내몰리는 상황 발생
- 헤지거래 과세특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주식 및 파생상품간의 손익 통산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회피 기능이 위축됨
- 장기적으로 세제차익이 최소화된 자산배분을 통해 자본시장으로의 투자 확대를 도모하여야 고객 수익률도 안정화되고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도 제고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이익과 손실의 비대칭적 취급 III

II

과세체계 측면

대응 방안

-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의 원칙 정립이 필요
 - 국내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손익통산 과세제도가 비체계적이고, 투자자들의 세후 투자수익률 관리가 안되고 어려운 이유가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차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임
-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 합산공제 및 이월공제 조항을 마련
 - 장기투자 펀드의 주식 등 자본손실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집합투자기구 내의 전반적 손익통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모색 (장기투자요건, check-the-box 방식 등 고려)
- ❖ 국민의 노후자금 마련과 기업성장 수혈을 위한 금융투자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기구 단위 내지는 투자계좌 단위의 자본손익 통산체제 구축에 관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세부담 때문에 거래를 동결(lock-in)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본손실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손실을 실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투자유인으로 인해 동결효과에 따른 시장위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음



실질과세 측면

실질과세원칙의 입법적 적용 필요성

- ❖ **국내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구축은 헌법 제11조 조세평등주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실질과세원칙이 필요**
 - 특히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있어 조세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남용적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소득세법의 입법-해석-적용이 필요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에 있어 남용적 조세회피가 횡행하는 경우, 과세시스템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조세저항이 커지게 됨
 - ✓ 특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회피는 전문성 있는 세무자문을 받을 능력이 되는 재력가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자감세**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부정적
- ❖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하여 실질과세원칙 일반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매매(wash sale) 등 남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구체적 금지 규정이 필요**
 -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이 규정한 복수거래 또는 단계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일반규정만 가지고 대응하기는 어려움
 -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실현행위에 대해 실질우위 원칙을 적용하고, 복수거래·단계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구체적 실질과세원칙 조항 필요

문 제 점 I

- ❖ 국내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상품 가장매매 방지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각하여 이익분에 대해 결손금 공제를 받고 다음 연초에 손실로 매각한 종목을 다시 재매입하는 경우, 가장매매를 통한 손실공제의 혜택을 누리는 맹점이 있음
 - 국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주식은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특정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02조)
 - 연말에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각하여 해당 손실을 이익을 실현한 종목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다음 년도 초에 손실 매각한 종목을 매입하는 경우 (bed and breakfasting 등의 기법), 일반적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매매로 볼 수 있음
 -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대부분 가장매매 방지 규정이 있음
 - 국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금지 규정 등 실질과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상술한 가장매매에 대한 대응 규정은 없음으로 인해 과세공백이 발생
 - ✓ 상술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매매가 반드시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장매매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은 시장 신뢰성 훼손

문 제 점 II

❖ 국내 주식시장에서 담세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대주주 보유액 요건을 가장매매를 통해 손쉽게 피해나갈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는데, 연말기준 시가총액 요건은 가장매매를 통한 회피가 수월함
 - ✓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시가총액 요건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함 (유가증권시장기준 2018년 3월까지 25억원, 2018년 4월 이후 15억원, 2020년 4월 이후 10억원, 2021년 4월 이후 3억원)
 - ✓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보유 주식을 대주주 보유요건 미만이 되도록 매각한 후,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매입하면 대주주 과세를 피할 수 있음
- 또한 여러 종목에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가 어느 종목을 매각하여 큰 양도소득을 본 경우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각하여 이익분에 대해 결손금 공제를 받고 다음 연초에 손실로 매각한 종목을 다시 재매입하는 경우 가장매매를 통한 손실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해외 제도

- ❖ 미국 내국세법상,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금융투자상품을 처분(매매·교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후 총 61일의 기간 내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옵션 등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를 가장매매로 간주하여 해당 자본손실은 손실공제 할 수 없음 (26 U.S. Code §1091)
 -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에 따른 손실을 공제하는 것 이외에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가짐
 - ✓ 취득가액: 공제가 안된 손실은 대체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됨
 - ✓ 보유기간: 가장매매된 주식의 보유기간을 대체 주식의 보유기간에 합산
 - 가장매매 기간인 61일은 역일(calendar day)이며 사업일(business day)이 아니며, 과세연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해당 기간이 다시 기산되지 않음
 - 가장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관련 조문에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주식 또는 증권’은 옵션 계약 등도 포함
 - 가장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대상인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은 해당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나 워런트를 포함
- ❖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제가 정비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대부분 가장매매 방지규정을 두고 있음

대응 방안

- ❖ **소득세법상 조세회피 방지규정으로서 가장매매를 통한 결손금의 공제 금지 규정을 마련**
 - 단 가장매매 방지규정 정비는 결손금 이월공제, 주식 및 파생상품간 결손금 공제 등 손실공제 제도에 관한 종합적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가장매매의 기간은 미국, 캐나다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가장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총 61일의 기간(거래일 포함)을 요건으로 할 것을 고려
- ❖ **주식 등 양도소득세제의 전면 확대가 있기 전까지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을 면하기 위한 가장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손금 공제 금지의 목적 이외에 과세대상 회피금지를 위한 가장매매 방지 규정도 정비하는 것이 필요**
 -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한 국내 실정에 비추어, 가장매매 주식을 대체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에는 파생상품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문 제 점

- ❖ 국내 소득세법상 공매도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 30%)을 1년 이상의 장기 양도소득(세율 20%)으로 위장하는 남용적 방법을 통해 조세회피를 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 규정이 없음
 - 공매도를 이용하여 주식 보유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남용적 조세회피의 대표적 방식으로 SATB(Short-Against-The-Box)를 들 수 있음
 - ✓ SATB란 주식의 단기자본이득을 장기자본이득으로 변환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short sale)하여 자본이득을 확정(lock-in)하고 이후 빌린 주식을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되갚는 거래방식
 - 예시 - A가 2016년 3월 1일 S사 주식 10,000주를 주당 100만원에 매입하고, 2017년 2월 1일 해당 주식 10,000주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주당 120만원에 매도하고, 2017년 4월 28일 보유 중이던 S사 주식을 주당 120만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해당 대차거래를 정산함
 - ✓ 이 경우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A는 2016년 3월 1일 취득한 S사 주식 1,000주를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20%의 세율을 적용(1년 미만 30%)받지만,
 - ✓ 미국 내국세법에 따르면 A는 2017년 2월 1일 차입공매도 시점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은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자본이득으로 간주됨

해외 제도

- ❖ 미국 내국세법은 아래와 같은 공매도 규정을 통해 단기자본이득을 장기화하고 장기자본손실을 단기화(근로소득 등과 합산하기 위해)하는 것을 금지
 - 첫번째 규칙 - 단기자본이득의 장기화(aging) 금지
 - ✓ 공매도하는 자본자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공매도 시점까지 장기(1년 초과) 보유하지 못한 자는 공매도를 통해 자본이득을 확정시키고 보유 자본자산을 이용하여 공매도포지션을 청산함으로써 자본이득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 (26 U.S. Code §1233(b)(1))
 - 두번째 규칙 -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본자산을 공매도 시점까지 장기보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자본자산의 보유 기산점을 공매도의 청산일 또는 해당 자본자산의 처분일 중 빠른 날짜로 정하여짐 (26 U.S. Code §1233(b)(2))
 - 세번째 규칙 -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본자산을 공매도 시점까지 장기보유한 경우, 공매도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장기자본손실로 간주 (26 U.S. Code §1233(d))

대응 방안

-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매도를 통한 자본이득을 양도소득 세제의 일환으로 과세 조항 마련
 - 국내 소득세법상의 양도 개념은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소득세법 제88조), 차입공매도의 차입자가 공매도로 취득한 자본이득을 과세하는데 있어 취약
 - ✓ 참고로, 현행 소득세 법제상 대주주의 보유주식 산정에 있어 대차주식은 차입자가 아닌 대여자의 소유로 봄 (동법 시행령 제157조제9항, 대법원2007두11092 판결에 대한 대응)
- ❖ 차입공매도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을 늘리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을 취득시점에서 관련 공매도 시점까지로 간주하는 규정 필요
 - 현행 소득세 법제상 공매도를 이용하여 장기자본손실을 단기자본손실로 조작하려는 시도보다는 단기자본이득을 장기자본이득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 (1년 보유기준으로 10% 세율 차이)
- ❖ 장기적으로 공매도, 스왑, 기타 파생상품계약 등을 이용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하면서 과세시기를 공매도 등의 거래포지션을 청산하는 시점까지 지연시키고 세제 혜택(자본소득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를 하기 위해 간주매매(constructive sale) 규정 마련 필요

문 제 점

- ❖ **주식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건물과 같이 필요경비 계산특례(이월과세, 비교과세)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재력가들이 손쉽게 조세회피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A가 X회사 비상장주식을 주당 만원씩 1억원 어치를 매입 한 후 해당 주식의 주가가 주당 6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 A가 해당 보유주식을 아내 B에게 6억 증여공제 혜택을 받으며 전량 증여한 후, B가 주당 6만원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을 전량 매각하게 되면 부부 A와 B는 X회사 주식 투자로 5억을 벌었음에도 세금을 한 톨도 내지 않는 결과를 초래.
 - 반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있어서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포함한 비교과세 제도를 통해 조세회피를 막음 (소득세법 제97조의2)
 - ✓ 즉 상술한 경우, i)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이월과세)과 ii) 수증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비교하여 높은 세액을 부과
 - 증권 등의 증여 후 양도는 주로 재력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 공백은 일반 납세자들이 보기에 부자감세로 비추어 질 수 있음

대응 방안

-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주식, 파생상품을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 단, 주식이 부동산보다 가격변동성이 큰 점에서 금융투자상품 취득가액의 의제기간을 단축시킬지 고려
- ❖ 미국 내국세법에 따르면 부부간 자산의 이전에 있어, 해당 자산이전에 따른 이익·손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산을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자산을 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26 USC § 1041)
 - 영국 소득세법상으로도 배우자간 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자본손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산을 이전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자산을 이전 해준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따름

❖ 스트래들 거래를 통한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

- **(논의 배경)**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파생상품의 상쇄포지션(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같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하여 자본손실과 자본이득을 각각 다른 과세연도로 분리함으로써 자본이득이 많은 과세연도에 인위적으로 자본손실을 만들어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증가할 수도 있음
- **(해외 제도)** 미국은 1960·70년대 스트래들(tax straddle)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횡행해짐에 따라, 1981년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ERTA)이 제정되어 내국세법 제1092조 스트래들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조세회피 목적의 스트래들 거래로 인한 손실공제를 금지
- **(대응 방안)** 향후 주식 등 양도소득세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스트래들 전략을 통한 조세회피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 후 필요한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스트래들 조항 마련

❖ 한국형 Kiddie Tax 논의

- **(논의 배경)** 국내 미성년자의 고액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외 제도)** 미국, 캐나다 등에 있어, 부모가 자신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누진세율이 낮은 자녀(18세 미만의 미성년자, 24세 미만의 대학생 등)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녀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모의 누진세율로 실질과세 하는 kiddie tax의 법리가 발전
- **(대응 방안)** 미성년자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누진세율 회피 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방안 모색 필요



장기 주식양도소득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주식 자본이득 우대과세의 논거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본질적으로 소득세인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장기소득인 경우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적 논거는 다음과 같음

- 1 **결집 효과(bunching effect):** 장기적으로 누적된 자본이득을 일시에 일반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처분시점에 세부담이 과중하게 증가
- 2 **인플레이션 효과(inflation effect):** 장기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자본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우대세율 적용
- 3 **동결 효과(lock-in effect):** 자본이득세율이 높을수록 이익실현시기를 늦추려는 경향이 나타나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 약화
- 4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논란:**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는 해당 기업이 법인세라는 소득세를 낸 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
- 5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장기투자자의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여 성장기업을 위한 투자를 촉진

❖ 상술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의 4가지 논거는 국내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주식 등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의 양도차익이 주택부동산 등 개인사용자산(personal-use property)과 차별화되어,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우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입법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음

결집 효과(bunching effect) 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누적된 자본이득을 일시에 일반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세부담이 부담하게 증가
 - 꾸준히 기업이 성장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장기보유 할수록 처분시점의 세부담이 증가 (기간 측면)
 - 또한 장기보유 할수록 누진세율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됨 (누진세율 측면)
- ❖ 결집 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이득 과세 계산을 연분연승법(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지만 과세 간결성(simplicity)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제도와 같이 1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분리과세,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연분연승법이란 과세표준을 발생년수로 나누고(연분) 1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계산된 금액에 발생년수를 곱하여(연승)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세액계산법으로 결집 효과를 줄이는 효용이 있음
 - ✓ 퇴직소득세 계산에 주로 사용됨
 - 그러나 대량매매가 특징인 주식거래 자본이득 계산에 연분연승법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며, 소득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퇴직소득과 달리 자본이득은 소득과 손실의 변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분연승보다는 일정시점(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으로 나누어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제가 합리성을 가짐

결집 효과(bunching effect) I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 (부자감세의 측면) 자본이득의 분리·우대과세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결집 효과를 고려해 보면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한 담세능력이 낮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음
- ❖ (인구고령화의 측면) 근로소득보다 자본이득에 더 의존하는 고령인구에게 결집 효과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자본이득 우대과세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주식투자 확대 기여
 - 중산층 노령 인구의 수입에서 자본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노령 인구의 4-5배에 달함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 평균적으로 노령 인구의 자본이득이 같은 수입을 가진 비노령 인구의 자본이득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음
 -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 정책은 중산층 노령인구의 조세부담을 덜어 노후 자금의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인플레이션 효과(inflation effect) 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 **주식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처분시 실질 자본이득이 감소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 우대세율 적용**
 - 통상적으로 자본이득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음
 - 미국 연방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가격을 인플레이션 조정이 없는 명목금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주식 처분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실질양도소득이 없음에도 명목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본이득세 부과
 -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세율은 세법상의 법정세율을 초과
 - 물가상승에 따른 세율조정이 없는 것에 대한 일률적 보상으로서 1년 이상 보유주식 처분에 대해 우대과세
 - 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할 때 높은 자본이득세율은 노령 인구 및 저소득 계층에 부담이 됨
 - ✓ 비노령 인구의 주 수입인 근로소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되지만, 노령 인구의 주 수입인 자본이득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본이득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있음
- ❖ **인플레이션 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adjusted)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하지만 과세 간결성(simplicity), 제도 구축비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미국에서 생계비조정(Cost-Of-Living Adjustment: 이하 "COLA")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고령화,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음
 - ✓ COLA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혜택과 세금을 조정
 - 조정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물가변동성으로 인한 조세 불확실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납부세액의 변화는 경제활동에 내재된 통상적 위험범위 내에 속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 ✓ 조정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결과적으로 물가연동으로 인한 우대세율 적용으로 인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음

인플레이션 효과(inflation effect) I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 현재 명목 NYSE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반영 NYSE 지수는 2007년 7월 수준을 넘지 못함

[물가상승률반영 NYSE 지수, 1966-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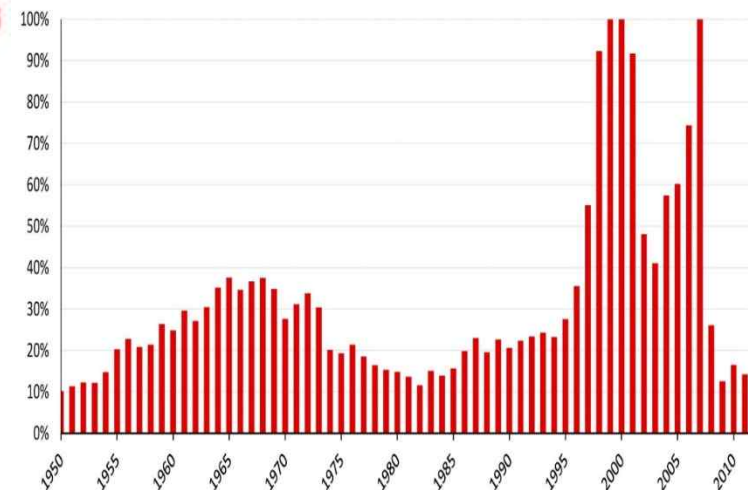


자료: InflationData.com (2017)

- ❖ 1999년, 2000년, 2007년 중 어느 한 해에 S&P 500 평균 지수를 벤치마크 하는 ETS를 매입하여 2013년에 평균 지수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손실 발생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으면 각각 19.6%, 12.1%, 7.7% 명목자본이득 발생

[자본이득세 중 인플레이션에 부과된 세금 비율]



자료: Tax Foundation (2013)

동결 효과(lock-in effect) 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자본이득세율이 높을수록 이익실현시기를 늦추려는 경향에 의해 거래 동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줄이고 자산포트폴리오를 왜곡시키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약화시킴

- 동결 효과는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보유를 지속하면 그만큼 세금 납부를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앞서 언급한 결집 효과 및 인플레이션 효과는 결과적으로 동결 효과를 낳음
- 자본이득세율이 높으면 동결 효과로 인해 경제 주체는 금융자산의 처분을 꺼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처분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매입하는 효율적 거래가 줄고 결과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약화
 - ✓ 투자자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동결 효과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 주식거래 동결 효과가 강하면 주식의 유동성 가치가 감소하고, 주식-채권 자산배분이 왜곡될 수 있음
- 상속세 부과 후 과세 대상 주식의 장부 가액이 상향조정(Stepped-up Basis) 되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할 유인이 큼

❖ 주식 거래 동결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분리과세,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부담을 경감해야 함

- 자본이득세율 인하는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처분 수를 증가시키고 이익실현 거래를 증대
- 1년 이내에 단기 자본이득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도 동결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장기투자 유도정책의 효용과 이익형량해 볼 필요가 있음

동결 효과(lock-in effec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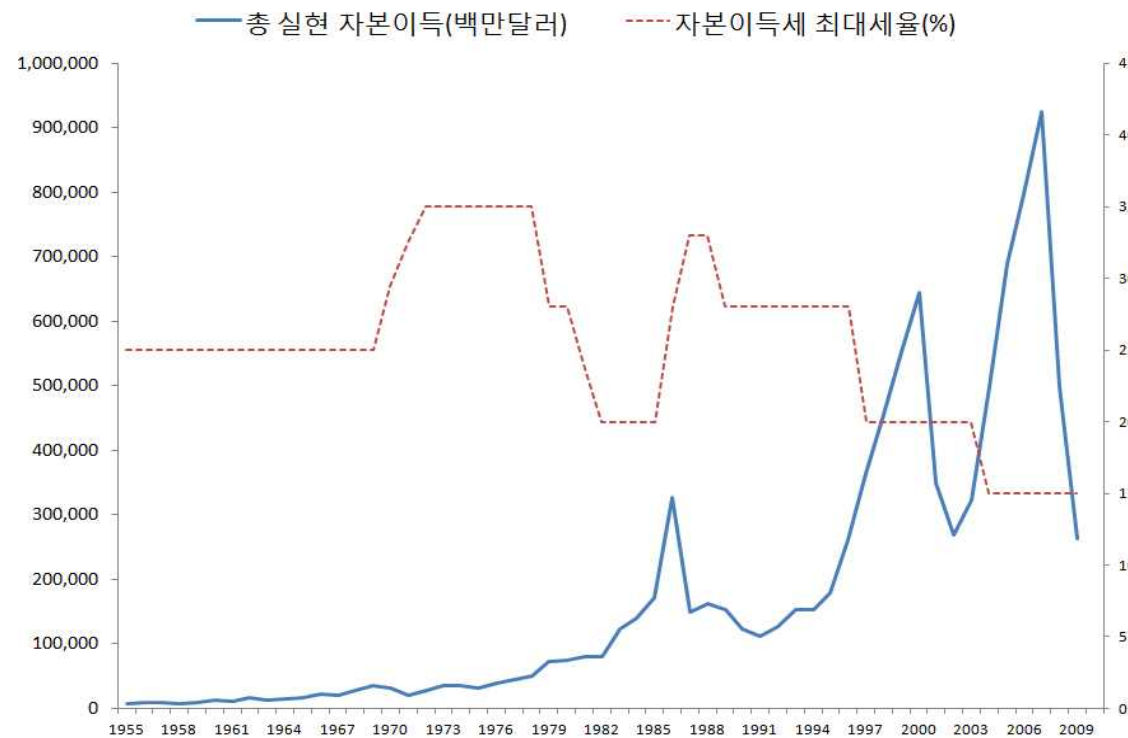
IV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주식 자본이득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세수증대 효과는 주식거래 동결 효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

➤ 즉, 주식 자산처분과 과세실현 정도는 자본이득세율에 대한 민감도 내지는 탄력성에 따라 결정됨

[미국 연도별 총 실현 자본이득과 자본이득세율 (1955-2009)]



자료: 미국 재무부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논란 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주식 자본이득 과세는 배당소득 과세와 더불어 법인세를 이미 부담한 회사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외형을 형성하는 측면이 있음

- 기업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 받은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세후 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음
- 기업이 배당세를 내고 세후 이익을 사내 유보하면 그 만큼 기업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고,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면 배당세 납부 후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음
- 미국 조세 부문 싱크탱크인 Tax Foundation은 2014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ITCI) 보고서에서 미국 자본이득세와 배당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이 미국 과세제도의 숨은 결함(pitfall)이라고 지적
 - ✓ ITCI는 세율이 낮고 이중과세가 적을수록 조세경쟁력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이중과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결집 효과나 인플레이션 효과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크게 나타남에 반하여, 이중과세 효과는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반영된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논란 I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이 법인세를 낸 소득에 대해 같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더욱 강함
 - 자본이득세와 배당세는 법인이 이미 세금을 부담한 소득에 대해 다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지분권자가 다시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적음
 - 고수익을 거두고 이를 사내 유보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후 세후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한 후, 해당 기업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삼중과세의 여지가 있음
 -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가 이중과세 또는 삼중과세의 효과를 크게 나타내면, 기업은 일감몰아주기, 해외 이익금 국내 유입 기피 등의 편법·탈법을 자행할 유인이 커짐
- ❖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미국의 AET(Accumulated Earnings Tax)에 비해, 국내 사내유보금 과세에 관한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더 큼
 - 미국 AET는 회사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이용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penalty)로서 공개기업보다 주로 비공개기업에 적용됨 (IRC §531)
 - 미국 AET는 탈세목적의 검사(test of tax avoidance purpose)가 있는 후에만 부과되며, 탈세목적이 있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당국이 부담
 - ✓ 실무적으로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라는 통지를 하며, 이에 대해 기업이 합리적 유보사유가 있음을 밝히면 이에 대한 반론에 대해 국세청이 입증책임을 부담
 - 국내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삼중과세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음

자본이득세제의 경제활성화 효과 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 해외 선진국에서는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을 통해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입법정책적 논거가 명확함
 -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 세제개편의 입법정책적 근거에 경제성장 논리가 포함됨
 - ✓ 미국 의회 보고서 등 과세 관련 정책보고서에는 투자자산 자본이득세율 증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이고 가계수입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정책적 논거가 많이 포함됨 (The Economic Effects of Capital Gains Taxation, 1997)
 - ✓ 2003년 미국은 "일자리 및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감면조정법"(JGTRRA)을 제정하여 적격배당과 장기자본이득 세율을 일치시키고 장기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줄임에 따라, 이후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루고 나스닥 기술주 기업들이 성장하여 경제원동력이 됨
 - 영국의 경우 1965년 자본이득세 도입의 입법적 근거 중 하나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꼽았는데, 이후 우대세율적용과 성장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잘 발전 시킴
 - ✓ 2017년 유럽위원회(EC) 보고서는 영국의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수한 세제인센티브로 꼽음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for Venture Capital, 2017)

자본이득세제의 경제활성화 효과 II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 ❖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는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한다는 점에서 국내 창업 벤처생태계 육성을 위한 자본이득세제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
 - 벤처업계에 따르면, 초기 엔젤투자자는 대부분 개인 소득세 납세자이기 때문에 장기자본이득세율이 창업투자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 (2012년 미국엔젤투자자협회의 미국 의회 증언 등)
 - Gompers 교수와 Lerner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이득세율이 1% 인상되면 벤처캐피탈 펀딩이 3.8% 감소
 - 영국의 VCT(Venture Capital Trust),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등 세제혜택 투자기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유는 벤처투자자와 우호적 세제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해외에서는 자본이득세 완화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 학자들간의 논의가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한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미진
 -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위험을 경감시킴으로써 장기투자 및 인내자본을 육성한다는 점에 큰 이론은 없음 (대표적인 예로, 미국 나스닥의 FANG 주식 성장의 지속가능성)
- ❖ 2003년 JGTRRA 입법을 통해 장기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간의 세제차익을 없앴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줄이고 조세중립성을 높여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인 자금조달기능,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 위험관리기능을 잘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



결어

- ❖ 국내 금융소득과세 선진화 논의에 있어 단순한 세수증대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조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조세 중립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가치간의 조화가 필요



- ❖ 상술한 세 가지 가치는 미국의 소득과세 제정에 있어 최우선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임
 - 미국의 세제 개혁 입법에 있어 법안 명칭은 The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82,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등으로 명명되는 것과 같이 상술한 세 가지 기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미국의 Tax Foundation은 국제조세경쟁력지수(ITCI)를 책정함에 있어 조세 중립성과 경쟁력(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세 형평성의 실질인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적 가치임(헌법 제11조)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



결어

과세체계 측면

- 담세능력 기준으로 양도소득 과세대상 확대 (대주주 기준 탈피)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합산 공제 및 이월공제
-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에 동일 과세

실질과세 측면

- 가장매매 방지
- 공매도 남용 금지
- 가족간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 스트래들 등 금융 기법을 이용한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
- 미성년자 투자이익 조세회피 방지 (kiddie tax)

경제성장 측면

- 장기자본이득 우대세율 적용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 영국의 VCT, EIS와 같이 일반투자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개인의 자산증식에 도움을 주는 세제 개발

Thank You !

감사합니다